

부문별 주요 기사

4월 1일 ~ 4월 30일

- | 대내경제
- | 남북관계
- |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4월 1일~4월 30일

대내경제 88

<전력>

북한 지방 전기공급 극도로 악화

<주민생활>

북한 당국, 주민들에게 과도한 사회적 과제 할당

북한, 협동농장의 비경지 토지 불법 임대 금지에 나서

태양절 특별공급 역대 최저 규모, 특별공급 의미 퇴색

<보건>

북한 주민 결핵 감염, 역내 북한발 보건 위기 우려

남북관계 91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채택

北매체, 판문점 선언 전문보도

대외경제 92

<대북제재>

유럽과 G7, 대북 경제적 압박 지속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조짐

<북러관계>

북·러 교역량 늘고 관계 밀착

<대외관계>

美, 북한 인권법 연장, '아시아 안심법' 발의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대내경제

<전력>

RFA(4.18, 4.20), 아시아프레스(4.19)

북한 지방 전기 공급 극도로 악화

북한의 지방 도시 전력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월 중순에 인터뷰한 한 대북 소식통은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전기가 전혀 오지 않는 날이 계속 되고 있으며, 그나마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10분 정도 온 것뿐이라고 전함. 보도에 따르면 양강도 지역에서도 작년 12월초에는 하루 30분~2시간 정도 이루어졌던 전기 공급이 최근 들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전기 발전의 60% 이상이 수력으로 이루어지는데, 매년 12월말~3월 중순까지는 강이 얼어 전기 공급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올해는 4월에 들어서도 지방 도시의 전력 사정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으로 인해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20년 만에 재가동 된 청수화학공장 역시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짐. 이에 반해, 주요 당 기관, 공장 기업소, 보안서, 군부대는 일정한 전기공급이 있으며, 평양지역도 하루 8시간 정도는 일반주택에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됨.

<주민생활>

RFA(4.8, 4.16, 4.19), 국민일보(4.15), 데일리NK(4.17)

북한 당국, 주민들에게 과도한 사회적 과제 할당

북한 당국이 건설 자금, 영농물자 구입자금까지 과도하게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소식임. 강원도 원산갈마관광지구 건설 지원 명목으로 양강도 당국이 1세대당 15kg의 옥수수 곡물과제를 할당하였으나, 북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인민위원회에서 300~500g으로 과제 할당량을 낮췄다는 소식임. 이는 최근 휴대전화를 소유한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건설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지원품과 주민들이 부담한 품목과 양에 차이가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사회적 과제를 통한 간부들 배불리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어 북한 지방 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또한 북한 농업성은 각 도의 농촌 경영위원회를 통해 농촌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주문하고, 모든 주민들은 각 단위별로 맡겨진 농촌지원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도됨. 특별히 공장기업소 단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학비료(요소비료)와 비닐박막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종업원 인원수에 따라 보통 1인당 5kg의 비료과제가 부과된 단위들이 많다고 함. 그러나 최근 중국이 비료에 대한 관세를 110%로 대폭 올리면서 무역기관들을 통한 요소비료 수입이 어려워져, 북한 내 시장에서 돈이 있어도 비료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짐. 이에, 소식통에 따르면 비료사정이 긴박해지자 공장기업소에서는 종업원들에게 비료를 구입해 오라며 강제로 여행을 가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내륙지역에서 국경 지역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료구입 확인서부터 작성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함.

북한, 협동농장의 비경지 토지 불법 임대 금지에 나서

국가에서 비료 등 영농자재를 일체 공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동농장들은 비경지를 개인에게 임대해주고 수확된 알곡의 30% 정도를 받아 영농자재를 구입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비경지’가 정보당 알곡 수확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는 토지로,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부여받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 북한 당국이 이러한 비경지를 임대하는 것은 국가의 땅으로 장사를 하는 반당행위로 취급하고 단속에 나선 것으로 소식은 전함.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평원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각 협동농장관리위원회 간부들에게 비경지를 재조사 하게 하고, 비경지로 등록한지 3년 이상 된 땅은 무조건 농경지로 재등록 하고 있다고 함.

태양절 특별공급 역대 최저 규모, 특별공급 의미 퇴색

올해 북한의 태양절 특별공급은 역대 최저 규모로인 것으로 알려짐.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은 북한 최대명절로서 매년 인민반을 통해 세대마다 쌀과 술, 고기 등 특별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인민반을 통한 특별공급이 하나도 없었다는 소식임. 그나마 각 기관이나 기업소를 통한 특별공급은 이루어졌지만, 기관이나 조직마다 배급량에 큰 차이가 났으며 별이가 좋지 않은 조직은 특별공급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전해짐. 소식통에 따르면 ‘군중외화 별이기업소’는 설탕 2kg, ‘답사관리소’는 도루메기(도루묵) 2kg과 화학조미료 한 봉지 등이 배급된 것으로 알려짐. 앞서 지난 2월 16일 광명절(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는

가구당 식용유 한 병과 천으로 만든 지하족(신발) 한 켤레의 특별공급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불평을 사기도 했음.

특별공급이 부실한 배경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적 어려움이 꼽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명절공급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설명임. 특별공급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태도 변화도 포착됨. 배급에 의존하던 예년에는 특별공급에 대해 기대가 컸지만, 시장 활동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오늘날에는 특별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으며 주민들 사이에서 명절공급에 대한 의미가 퇴색하는 분위기도 엿볼 수 있다고 함. 이는 그만큼 김정은 정권에서도 통치수단으로서 특별공급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보건>

데일리NK(4.12), 연합뉴스(4.12), 중앙일보(4.12)

북한 주민 결핵 감염, 역대 북한발 보건위기 우려

북한 주민이 심각한 수준의 결핵 위험에 처해있으며 ‘다 약제 내성 변종(multi drug-resistant strains)’으로 인한 북한발 보건위기가 우려된다는 보도임.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산에 의하면 북한의 13만건의 결핵 감염 중 5천 7백 건이 리팜피신이나 최소 2가지 이상의 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대한의학회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실제 보건상황은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 연구진이 결핵 환자 수백명의 객담 샘플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4분의 3이상이 다제내성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런 슈퍼 결핵균에 감염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치료를 지속해야하며 6개월 동안 주사를 맞고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함. 이러한 북한의 보건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지원이 중단이 예고되어 ‘슈퍼 결핵’의 창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북한에 결핵 퇴치를 지원해온 세계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 이하 세계기금)은 자원 배치와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보장 및 리스크 관리가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오는 6월부터 지원 중단을 예고하였음. 이에 대해 의학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결핵 퇴치 지원이 중단되면 “북한 전역에서 품질이 보장된 결핵 치료제의 막대한 품귀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특히 하버드 의과대학원의 의료진은 세계기금에

공개서한을 보내 치료제 부족 탓에 의료진이 치료제를 배급하고 환자들은 필요한 복용량을 채우지 못해 다제내성 결핵균이 급속도로 생겨난 전례를 지적하였음.

동시에 북한 주민의 결핵문제는 북한 주민뿐 아니라 향후 역내 모든 이들의 보건 참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남.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결핵균이 북한 밖으로 퍼져나갈 경우 이를 퇴치하는 데 수십년이 걸릴 수 있고 접경국인 중국이나 한국의 공중보건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임. 실제 북중접경도시인 단둥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검역 당국이 검사한 북한인 9천500명 가운데 33명이 결핵 환자로 확인됨.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자국 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남북관계

<남북관계>

VOA(4.27), 연합뉴스(4.28), 매일경제(4.29), 뉴시스(4.30), 헤럴드경제(4.30)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채택

27일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을 채택함. 판문점 선언에는 ①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②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세 가지 조항이 포함됨.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한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에 대해 Aa2라는 역대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으며, 남북정

상회담 이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축소되고 한국신용도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北매체, 판문점 선언 전문 보도

4월 27일 정상회담 이후 약 16시간만에 북한의 조선통신은 ‘판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판문점 선언 전문을 과거 1,2차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게재함. 北매체는 일부 표현을 판문점 전문과 다르게 사용하였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이며, 그동안 북한이 인정하지 않았던 서해 북방한계선(NLL)도 전문에 포함되었음. 노동신문 역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을 61장의 사진과 함께 게재, 판문점 선언도 함께 게재되어 주민들에게 ‘비핵화’의지를 공식화함.

대외경제

<대북제재>

동아일보(4.6), 연합뉴스(4.19), RFA(4.4, 4.23), VOA(4.20)

유럽과 G7, 대북 경제적 압박 지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30일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밀수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선박 및 선박회사들을 안보리 블랙리스트에 추가함. 선박 27척, 개인 1명, 선박회사 21곳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에 스위스, 영국 정부의 동참이 이어짐. 유럽연합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연루된 개인 4명을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한 이행조치를 실시함. 한편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각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계된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북중관계>

데일리NK(4.4), 동아일보(4.3), 서울경제(4.7, 4.17), 조선일보(4.6), VOA(4.4)

중국의 대북제재 약화 조짐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대규모 경제협력과 체제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 위원장의 방중을 기점으로 중국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보도임.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자 갱신과 신규 파견을 모두 금지한 유엔 결의에 따라 중국 정부도 지난해 말 북송 지시 문서를 발송하며 제재에 동참해 왔으나 올 3월에 들어 관련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전해짐. 중국 기업들의 북한 근로자 송환이 중단되고, 수 백명의 북한 여성들이 제재를 피해 공식 해외 파견이 아닌 임시통행증 격인 도강증을 받아 중국에 파견된 정황이 포착되었음. 유엔 제재가 수출을 금지한 북한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이를 어긴 단동의 수산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4월 중·하순을 시점으로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해금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짐. 북-중 간 교역수준을 보여주는 단동과 북한을 오가는 트럭 통행량 또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북러관계〉

문화일보(4.10), RFA(4.9)

북·러, 교역량 늘고 관계 밀착

지난해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간 교역액이 전년도 대비 약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러시아의 대북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유엔제재 대상인 석유, 석유제품 및 광물성 연료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 내 항구들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불법적으로 제3국 선박에 환적되어 수출되고, 유엔제제품목이 북한으로 밀반입되는 문제가 제기됨. 이러한 가운데,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통상 및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임.

〈대외관계〉

중앙일보(4.26), VOA(4.26)

美, 북한 인권법 연장, '아시아 안심법' 발의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아시아비안보 소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4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시아 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를 발의함. 본 법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향후 5년간 매년 제공되는 1억 5,000만달러의 예산 중 1,000만달러를 북한의 정보를 자유화 하는 노력에 사용하기로 함. 미국 당국은

매년 300만달러 수준의 예산을 북한의 정보 자유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이어서 미국 상원은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2022년까지 연장함.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변화를 내부적으로 촉진시키 위한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을 증진하는 것을 강조함. 전자기기(USB, 휴대전화, 인터넷 등)를 통해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RFA(4.4, 4.17, 4.25)

아래 표는 4월 한 달 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단체 (국가명)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독일 카리타스 (국제 구호단체)	2018	지원사업	노인건강센터 및 온실 지원 사업	2018년 한 해 북한 지역 10곳에 온실, 4곳에는 노 인건강센터를 세울 계획임
세계식량계획 WFP	2018. 3	영양강화식품	1,443톤의 영양강화 식품	지난 3월 북한의 취약계층 약 46만 8천명에 영양강화 식품 제공
스위스 정부	2018	지원금	약 760만달러	스위스 외무부는 올해 북 한의 식수 위생과 식량난 해소를 위한 760만달러 규 모의 대북지원 계획을 밝 힘.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기사 원문 리스트

- [2018.4.03] 中기업들, 北근로자 송환 중단 (동아일보)
- [2018.4.04] “中 허룽서 北 여성노동자 수백명 이동”…김정은 방중 효과? (데일리NK)
- [2018.4.04] 스위스, ‘북 선박 15척, 개인 1명, 회사 21곳’ 추가 제재 (RFA)
- [2018.4.04] 독일 카리타스, 북에 온실과 노인시설 공사 시작 (RFA)
- [2018.4.04] 중국 “북한인 노동자 비자 갱신 중단 등 대북제재 이행” (VOA)
- [2018.4.06] 英, 정부, 선박 15척 등 대북제재 명단 추가 발표 (동아일보)
- [2018.4.06] “중국, 北수산물 반입 비밀리에 해금 지침…오가는 트럭도 늘어” (조선일보)
- [2018.4.07] 中 대북제재 금가고 6총회담도 ‘술술’…北 의도대로 진행되나 (서울경제)
- [2018.4.08] 북, 주민들에 영농물자 구입자금 떠 넘겨 (RFA)
- [2018.4.09] “북-러 극동 교역액 지난해 82% 증가” (RFA)
- [2018.4.10] 북·러 밀착…모스크바 간 리용호, 러 외교장관과 회담 (문화일보)
- [2018.4.12] 국제기구 북한 결핵 퇴치 지원 중단, ‘슈퍼 결핵’ 창궐 우려 (중앙일보)
- [2018.4.12] 美 매체 “북한 주민 심각한 결핵 위험 상태” (데일리NK)
- [2018.4.12] 북한발 ‘슈퍼결핵’ 경보… 국제기구 철수에 역내 보건참사 우려 (연합뉴스)
- [2018.4.15] “김일성 생일 태양절, 평일로 전략?” 北,특별 배급 실시 안해 (국민일보)
- [2018.4.16] “북 당국, 협동농장 비경지 개인 임대 금지” (RFA)
- [2018.4.17] “김정은, 시진핑에 대규모 경협 요구” (서울경제)
- [2018.4.17] WFP “지난달 북 주민 47만명에 식량 지원” (RFA)
- [2018.4.17] 과도한 세외부담에 주민불만 폭발, 결국 꼬리 내린 양강도 당국 (데일리NK)
- [2018.4.18] 2016년 재가동한 북 ‘청수화학’공장 또 멈춰 (RFA)
- [2018.4.19] G7 재무장관, 북한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 최대 압박 지속 (연합뉴스)
- [2018.4.19] 북, 올해 태양절 특별공급 역대 최저 규모 (RFA)
- [2018.4.19] 전력공급이 더욱 악화… 1초도 오지 않는 ‘절전지역’ 확대 (아시아프레스)
- [2018.4.20] EU, 독자 대북제재 명단 4명 추가…북핵 자금조달 관련 (VOA)
- [2018.4.20] 북 지방 도시 전기사정, 봄 들어서도 개선 기미 없어 (RFA)
- [2018.4.23] 영국, EU에 이어 북핵·미사일 관련 인물 4명 추가 제재 (RFA)
- [2018.4.23] 북한 최고위급 정상외교에 물가 소폭 하락 (RFA)
- [2018.4.25] 스위스, “제재에도 올해 760만달러 대북지원 예정” (RFA)
- [2018.4.26] 미 상원, 아시아 정책법안 발의…북한 정보 자유에 1천만 달러배정 (VOA)
- [2018.4.26] 美상원, 북한인권법 연장안 ‘만장일치’통과…‘2022년까지 연장’ (중앙일보)

[2018.4.27] [남북정상회담] 남북, 판문점 선언 채택...완전한 비핵화 실현, 올해 평화협정
전환 추진 (VOA)

[2018.4.28] 北중앙통신, '완전한 비핵화' 목표 포함 판문점 선언 전문 보도 (연합뉴스)

[2018.4.29] 달라진 北언론...판문점 선언 그대로 보도 (매일경제)

[2018.4.30] “남북정상회담, 한국 국가신용도에 긍정적”...무디스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평가
(헤럴드경제)